

태풍 '볼라벤' 피해

전북 양식장 피해 '눈덩이' 재해보험 가입 4%도 안돼

■ 두 번 우는 전남 양식어민들

태풍 볼라벤으로 완도와 진도 등지의 양식 어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당했지만 대다수 어민들이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전남도는 "이날까지 태풍 피해를 집계한 결과, 해남 43여가에서 운영하는 전북 가두리 4800칸, 완도 34여가의 전북 가두리 1만1060칸이 전파되거나 유실돼 40여억원의 피해를 입었다"며 "하지만 상당수 어가가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바다의 기상 상태가 나빠 일부 지역만 집계했기 때문에 태풍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막상 전남지역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률은 4%를 밑돌고 있어 양식어가들의 피해복구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배나 사과 등 농작물 보험의 가입률이 품목에 따라 60~90%에 달하는 것에 비하면 양식보험 가입률은 턱없이 낮은 수치이기 때문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수산물 양식보험에 가입한 도내 양식어가는 모두 273

어가로 전체 대상인 8962 어가의 3.5%에 불과했다. 넙치를 양식하는 179어가 중 27여가에서 수산물 양식보험에 가입해 15.1%로 가장 높았으며 해상 가두리(어류)는 8.5%, 전북 어가에 달하는 김은 단 한 어가도 가입하지 않았다. 특히, 이번 태풍으로 최악의 피해를 입은 전북은 4619어가 가운데 단 164여가만이 가입했다. 올해 어민들이 낸 보험료는 13억 2000여만원으로, 이 가운데 국비와 도비 등 79%를 제외한 자부담은 2억 7800만 원이다.

올해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은 지난해 넙치와 전복, 김 등 5개 품목에서 참돔, 돌돔, 감성돔 등 11개 품목으로 확대됐다. 특히 양식 어업인들이 재해보험에 가입할 경우 국가 보조금과 지방비 지원액을 합하면 총 보험료의 79%를 지원받아 자부담은 21%만 내면 되는데도 대부분 어가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양식보험이 소멸성 보험인데다 시

설규모에 따라 보험료가 수백만원에 이르는 등 지자체의 지원이 있다고 해도 자부담해야 할 금액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어가는 농어업 재해법에 따른 복구비 지원은 가능하지만, 피해액을 모두 보상받지는 못한다. 복구비는 치어나 치패(稚貝)를 기준으로 지원하기 때문이다. 또 복구비를 지원받으려면 면허와 허가가 있어야 하고, 사전에 어떤 어종을 몇 마리 키우는지 신고하는 일식허가서 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서류가 미흡할 경우에는 한 푼도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에 대비한 양식어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며 "지자체에서 예산까지 지원했는데도 가입하지 않은 어가들이 많아 피해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올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예산을 지난해 2억원에서 2배 늘어난 4억원을 책정·지원해 주고 있다.

○광복기자 kroh@kwangju.co.kr



29일 광주시 남구 지석동 지석마을의 한 농가에서 강운태 광주시장과 공무원들이 태풍으로 훼손된 비닐하우스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육군 31사단 장병들이 29일 곡성군 입면 만수리의 한 사과농장에서 태풍으로 떨어진 사과를 줍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농경지·양식장 피해자 지방세 면제 농가·中企에 복구자금 1000억 지원

■ 태풍 피해 복구 지원책 다양

태풍 볼라벤이 휩쓸고 지나가면서 속대밭이 된 농경지와 양식장 등지의 빠른 복구를 위해 피해자에게 지방세를 면제해 주는 등 다양한 지원책이 주어진다. 농축산시설 등에서 443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광주시도 신속한 태풍피해 복구를 위해 광주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건의했다. 행정안전부는 29일 "태풍 볼라벤으로 피해를 본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세 지원기준'을 일선 시도에 보냈다"고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이번 태풍으로 인해 주택이나 선박, 자동차 등이 파손되거나 없어져 2년 이내에 복구하거나 대체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주택 파손이나 농경지, 비닐하우스 침수에 대해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감면해 줄 수 있다.

또 태풍 피해자는 취득세 등에 대해 6개월 이내에서 납부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으며, 이미 과세된 재산세 납부가 어려우면 6개월 이내 징수유

예도 가능하다.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는 1차례 더 연장해 최대 1년까지 늘릴 수 있다.

광주시도 이날 신속한 태풍피해 복구를 위해 행정안전부, 소방방재청 등 중앙정부에 특별재난지역선포를 건의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태풍으로 농축산시설 등 1297건, 피해액 443억원이 발생해 농민들의 생계지원과 긴급복구가 시급한 실정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재난지원금과 복구에 필요한 금액 중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금액에 대해 일정비율로 국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광주시는 또 피해를 입은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시민 편의를 위해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한 달간 유예하기로 했다. 유예기간 중에는 최대 30만원에 이르는 검사 지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조속한 복구를 위한 금융 지원도 뒤따른다.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태풍

볼라벤으로 피해를 본 농가와 중소기업에 대출지원 등 긴급복구대책을 시행한다. 태풍피해 농가와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피해복구자금 1000억원을 신규로 긴급지원하고 기존대출에 대해서는 6개월까지 이자납입유예를 해주기로 했다. 중소기업은 최대 3억원, 개인은 3000만원까지 가능하며 대출기간은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15년, 개인은 10년이다.

광주은행도 태풍 피해를 본 업체와 개인 등을 대상으로 29일부터 태풍피해 복구자금 5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중소기업은 최대 10억원까지, 개인은 최대 1억원까지 '재해복구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기존 대출금이 만기 도래하는 경우 일부 상환 없이 전액 기한연장을 해줄 방침이다.

추석을 앞두고 나와 피해를 입은 과수 농가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농협은 이달부터 오는 9월 9일까지 서울시 양재동 농협유통 등 수도권 대형판매장 6개소에서 떨어진 사과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한다. 또 무안 남양신도시 전남농협 특별직거래장터에서도 식용 가능한 사과를 선별해 특별판매를 하기로 했다.

○광복기자 kroh@kwangju.co.kr

빛이만평 - 김중두

태풍도 양심 좀 있어야!

가거도 세상과 단절 유·무선 전화 모두 불통

초강력 태풍 볼라벤이 강타한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는 통신시설이 붕괴돼 이틀째 세상과 단절됐다. 29일 오후 6시 현재까지 유·무선 전화가 모두 불통 상태다. 가거도에는 324세대 520여 명의 거주하고 있다.

흑산면에 따르면 이번 태풍으로 인해 가거도 방파제 280m(완파 180, 반파 100)가 무너진 것을 비롯해 대형 인양기 1대와 선박 4척이 파손됐고 주택 2채가 붕괴됐다. 하지만, 접근이 불가능해 정확한 피해규모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흑산면 관계자는 "현재 가거도는 위성전화 1대가 유일한 통신수단"이라며 "목포에서 수리부품을 실은 배가 도착해야만 통신시설 복구가 가능해 주민들의 불편은 당분간 지속될 것 같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

www.koreanair.com

갈 때는 비즈니스의 기회를,
올 때는 마음의 평화를 찾았다
황금빛 도시에서
찾은 평화, 미얀마

대한항공 미얀마 양곤 주 4회 신규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